

무주 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부실공사 의혹

옹벽 블록쌓기·용수로 터파기 등 기초규정 무시... 시급한 대책마련 요구

무주군 군도5호선(내동지구)선형 개선사업이 시공과정부터 부실징후가 드러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이 총사업비 20여억원을 투입해, 무주를 전도와 후도로 잇는 고품질 도로 선형사업이다.

이런 공사과정에 쌓은 옹벽블록(보강토)이 무너지고 용수로 하단 쇄골이 드러나는 등 시공부터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G토목기술사에 따르면 옹벽블록 쌓기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보조기층위에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타설된 기초콘크리트는 충분한 양생을 거친 후 상단에 첫 단을 놓고 벽면 맨하단에 유공관을 놓고 보조기층을 매설한다.

옹벽블록을 쌓을 때에도 각각마다 쇄골골재로 뒷채움을 하는데 뒷채움은 보조기층을 단단히 하기 위함으로 진동롤러 등을 통해 다져서 뒀다 집 시험을 해야한다.

또한 뒷메우기를 할 때는 배수층도 확보해야 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현장에는 이미 쌓아놓은 5단가량의 보강토가 이번 호우로 무너져 내렸으며, 무너져 내린 틈 사이로는 쇄골골재(순수



무주군 군도5호선(내동지구)선형개선 공사 현장에서 공사 과정에서 쌓아놓은 옹벽블록(보강토)이 무너지고 용수로 하단 쇄골이 드러났다.



자갈) 보조기층이 아닌 폐골재와 흙토사로 채워져 뒷채움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옹벽블록으로 사용된 보강토는 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더욱 뒷채움 다짐이 중요함에도 물론 환이 떨어지는 폐골재를 사용한 것이 옹벽블록 무너짐의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협소한 도로작업장 방호시설을 설치해 교통사고 등 2차 사고에 대비해야 하나 골목길 도로에 라바콘만 비치하고 위험표지나 안내판조차도 적재적소에 위치하지 않았으며 현수막 또한 잡초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선엔 띄질 않았다.

더우기 사용하다 폐기된 각종 자재들은 재밧데로 내뒹굴고 있으며, 근로자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안전 관리에도 미흡하다는 질타가 일고 있다.

주민 유모(66)씨는 "이번 옹벽블록(보강토)무너짐 사태를 볼 때 레미콘 기초타설 전 하단과 비닐씌우기, 버림 콘크리트 폭 등의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용수로 구조물 철근 배근 결속선 연결 상태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단축과 경비절감을 위해 기

본 규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별문제 없을 듯 자의적 판단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져야 기후변화에 따른 급속폭우에도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 군도5호선(내동지구) 선형 개선사업은 (유)쌍용건설이 지난 4월 26일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월 17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12억3,160만900원에 입찰한 사업으로, 순수금 5억7,800만원과 노무비 1,440만4,500원은 선 지급된 상태다. /무주=전문기자

전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 연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

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이들 세대의 경우에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공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하고, 아동 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전복 유일 선정

전주시가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이계순의동화속어린이집과 학산어린이집, 하가엔젤어린이집, 연지어린이집 등 전주지역 4개 어린이집 5개 반에서 통합형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됐다.

현재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산어린이집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열방으로어린이집, 한솔빛어린이집, 효자어린이집 등 5곳을 포함하면 전주지역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9곳(10개반)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번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은 기존 어린이집의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가정양육 중인 6개월~5세 아

동 중 시간 단위의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최소 2주, 최대 1개월 단위로 예약하고 이용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통합반 시범사업 이용료는 시범사업 기간인 올 연말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각 가정에서는 시간당 보육료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이 월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을 내야 한다.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예약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8월 이용자를 위한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동 발달과 연령에 맞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제공돼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호우피해 주거취약가구 집수리 지원

전주시, 중위소득 75%까지 확대... 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주시가 호우피해를 입은 주거취약가구의 집수리를 돕기로 했다.

시는 35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호우피해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가구 집수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등 저소득가구로, 시는 집중호우 피해가구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집수리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일시 완화했다. 단,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옥기 기자

주요 지원내용은 △도배·장판 교체 △창호공사 등 주거 불편을 초래하는 주택 보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경우에는 문턱 낮추기와 경사로 설치, 보조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할 후 순차적으로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고통을 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8월부터 전주지역 택시요금 4년 만에 오른다

기본요금 3300원→4300원·추가 거리 요금 등도 인상

오는 8월 1일부터 전주지역 택시요금이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전주시는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주개인택시사단위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요금 변경 신청을 토대로 오는 8월 1일 0시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변경 내용은 앞서 지난 6월 30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주지역 택시의 기본요금(2km 거리)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또한, 기본요금 거리 이후 추가되는

거리 요금도 137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단, 심야할증(0시~4시, 20%)과 타시군 등 사업구역외로 나가는 시계의 할증(50%)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미터기 수리 점검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된 요금을 받도록 해 승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으며, 택시요금 변경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요충지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